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

김준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들어가며

“모든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 첫걸음 기회를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지난 9월 청년주간을 맞아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서 정부는 청년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 이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미래 설계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을 청년과 직접 소통하는 ‘미래대화 1·2·3’을 통해 올해 9월부터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문화예술, 청년취업, 청년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내년에는 청년주거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을 만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 자립준비청년 카페, 천원의 아침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과 함께하면서 “청년 참여 확대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다. ‘청년친화도시’는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 청년의 삶과 목소리가 도시의 구조와 정책에 반영될 때, 도시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이 시대 청년의 삶과 역할의 변화, 도시 속 청년의 위상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는 청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하고 ‘취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도시 활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청년이 떠난 도시는 미래를 잃기 때문이다.

과거 청년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 진입 대기자였다면, 오늘날의 청년은 단순히 사회 진입 단계에 머무는 집단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청년의 삶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창업,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의 변화를 주도한다. 도시는 청년에게 기회의 장이자 도전의 무대이다. 주거·일자리·문화·교통 등 도시의 모든 요소가 청년의 삶과 직결되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도시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청년은 혁신적 사고와 실천력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도시의 공동 설계자로 인정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이 도시 속에서 존중받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청년친화도시의 출발점이다.

「청년기본법」과 청년친화도시 제도의 의의,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청년정책을 단편적 지원에서 종합적·체계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었다. 특히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방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해 도시정책을 설계·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주거·일자리·교육·문화·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주권정부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 인식하며, 청년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는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청년

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적 실험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저소득·취약 청년 중심의 지원에 머물렀다면,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을 지향하며 보편적 지원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기조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공간적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청년친화도시’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모델이다.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관악구는 ‘청년수도’를 표방하며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형 모델을, 부산진구는 서면의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문화·복지형 모델을, 거창군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도시가 가진 고유한 공간적 자산과 청년의 활력이 결합하였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말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로 지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러한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는 단순한 청년 지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청년친화도시의 나아갈 방향이다. 청년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결합된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공유주거 모델을 확대하고, 교통·문화·복지 인프라를 청년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이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주도하도록 한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교통 등 미래 과제를 청년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가 세대 간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다.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도시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

결국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 청년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 청년의 꿈과 도전이 존중받는 도시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국가와 지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나가며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열쇠는 결국 청년에게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년의 활력이 골목마다 넘쳐흐르고, 그 에너지가 다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청년친화도시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청년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전략